

유엔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윤 미 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I. 정대협 활동의 시작

1970-80년대의 국내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운동단체들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와 분단으로 인해 민족수난사 속에서 고통당한 여성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외화획득의 명분하에 정부에 의해 조장된 관광산업정책으로 인해 자행되는 한국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한 과제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 국내에서 정신대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국제세미나에서였다. 그리고 1990년 18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정대협을 발족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운동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II. 민족문제, 여성문제에서 인권운동으로 제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된지 오는 11월 16일로 만 4년이 된다. 아시아지역에서 운동조직이 다른 나라 여성들, 특히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10만-20만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80-90% 이상이 조선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여성의 문제, 민족문제로 제기된 이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은 아시아피해국과의 연대운동과정에서 그리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인권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 죄이며 전쟁범죄라는 인권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유엔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부터이다.

III. 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 갔나?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했더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정신대문제를 일본정부 스스로에게 맡길수가 없었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모토오까 쇼지의원이 "강제연행된 중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노동성관리가 "중군위안부는 정부가 한 일이 아니었고,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대해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항의하고 서한을 보냈지만 일본정부측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단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때 한국국회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을뿐이었다.

이렇게 일본정부와의 대결에서 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대협은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찾아 1992년 초에 유엔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IV. 유엔에서의 일본군'위안부'문제

1. 처음으로 제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한 것은 1992년 2월이었다. 처음에는 유엔의 어느 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효재 공동대표가 미국의 유엔 본부를 방문하여 여성문제, 인권문제담당자들과 접촉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신대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것이 그 시작이었다. 유엔본부에서 이대표가 접촉한 여성문제 담당자가 여성지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에게로부터 인권위원회에 제기하라는 조언을 비로서 들었고,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가 귀국한 이후 정대협은 곧바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 세계 NGO단체 대표들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개요에 대한 설명문과 함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발언 및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편지는 실제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고, 몇개의 여성운동 NGO에서 편지와 함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대협의 유엔활동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대협에서 직접 유엔에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기 바로 이전에 이 문제가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기되어 있었다. 정신대문제를 알게되었던 일본인 변호사 도즈카 에츠로가 1992년 2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그 후 5월에 열린 인권소위원회 산하의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해 놓았던 상태였다.

2. 본격적인 유엔활동

-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결정 -

1) 이런 기반위에서 정대협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의 지원을 얻어 1992년 8월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 첫 회의에는 이효재 대표,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 정진성 조사연구위원장, 황금주 정신대할머니 이렇게 4명이 참석하여 소위원회에서 2회 공식 발언하고, 유엔주재 언론과의 회견, 민간단체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NGO브리핑에서 정신대할머니의 증언과 함께 정대협의 운동과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설명회에는 조총련 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대표들이같이 참석하여 강제연행에 관한 사실들을 폭로하였다.

이때 유엔인권소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일본군의 정신대가 된 아시아 - 주로 한국-의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재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반 보벤)'에게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 후 정대협은 같은해 12월 11-13일에 유엔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 반보벤 교수와 도즈카 에츠로 변호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정신대문제"라는 세미나를 개최하므로 정신대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었다.

이후 정대협은 유엔 인권위원회 회의마다 참석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1993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그리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2) 1993년 3월 방콕의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에 이효재,

제 47차 인권소위에 전쟁중의 노예제에 대한 Working Paper를 제출하도록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정부, 정부간 기구, 민간단체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금년 8월의 유엔인권소위는 "전쟁중에 행해진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해 접수한 정보를 인권침해 범죄자 불처벌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관에게 보낼 것을 결정하고, 특별보고관들이 실무자들이 제 49차 회기중에 접수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현재, 남북한 정부는 린다 차페즈를 공식초청하여 내년 3월중에 남북한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V. 성과

1992년부터 정대협이 국제적 운동을 전개해 오면서 이룩한 몇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군국주의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군국주의, 전쟁, 가부장제, 집단강간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촉발시켰다. 많은 석사, 박사논문이 작성중에 있으며, 전쟁과 강간 등의 제목으로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운동은 평화운동과도 연결되었다.

둘째로 여성인권운동이 목표한대로 유엔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단체로 하여금 여성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고취시키고 인권의 개념을 넓히는 성과를 낳았다. 전쟁중에 여성이 겪게 되는 집단강간, 성노예의 문제를 심각한 여성인권문제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그리고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등 유엔의 공식문서에 이를 포함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조사되고, 이 조사내용은 세종류의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VI. 앞으로 남아 있는 일

1) 북경여성대회

95년 8월 30-9월 8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 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제판]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외에 아시아국가, 또는 보스니아의여성들과 연대하여 [전쟁중의 성노예에 관한 여성 포럼]등을 며칠에 걸쳐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연대운동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민족주의가 갖는 민족,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여성들의 연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한 여성운동은 구체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큰 힘이 없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단지 도덕적 지원이나 세계 각곳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의 무대인 정치영역, 경제부문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건이라고 생각한다.

정진성씨가 참석하여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서명을 받는 등 정신대문제를 알려나갔다.

3) 1993년 5월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는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강제노동, 즉 2차 대전중 일본에 의한 정신대와 강제노동자로 일했던 남녀의 상황에 대해 그 정보를 인권소위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4) 그리고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이효재, 신혜수, 정진정, 김복동, 윤미향이 참석하였는데, 이 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는 가운데 정대협은 아시아여성인권단체와의 연대와 세계여성인권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으로 정신대운동을 여성인권운동으로써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회의의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도 일본정부가 정신대문제와 관련한 항목에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집단강간, 성노예... 현재 진행중인 폭력'으로 통과시키고자 로비하였지만 결국은 현재를 모든으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통과되어 '...집단강간, 성노예.. 이러한 모든 폭력'으로 통과되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5)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신혜수 국제협력위원장이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특별보고관 임명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마침 보스니아 집단 강간사태와 맞물려 국제적인 호응을 얻게되었다. 이 회의에서 정신대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등의 상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담당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소위는 특별보고관에 린다 차베즈를 임명하였다. 특별보고관에게 주어진 중요임무중의 하나는 제 2차 세계대전중의 일본에 의한 성노예에 관해 관련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 일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정부가 현대형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유엔은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배상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6) 그러나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8월의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의사항인 특별보고관 임명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미국이 자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인권소위원회의 조사내용이 너무 많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승인을 연기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임명건이 통과되어 스리랑카의 쿠마라스와미가 임명되어 1차 보고서(총체적 보고서)를 95년 2월, 2차 보고서는 96년 2월, 3차 보고서는 97년 2월에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 계획에 의하면 1차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한 분야로 보고할 예정이고, 3차 보고서의 국가에 의한 폭력 항목에서 역시 일본군'위안부'를 다룰 계획이다. 현재 정대협은 3차 보고서를 2차 보고서인 가정내 폭력문제와 순서를 바꾸어 보고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다.

7) 그리고 5월의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는 "일본정부는 정대협과 함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는 결의를 하였고, 6월의 자카르타 각료회의에서는 일본의 갖은 방법을 동원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정부는 전쟁중에 체계적인 강간을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했을때 응해야 한다."이다.

8) 금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는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즈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이 없이

일본이 세계평화를 의논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시아 여성들에게 행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제적 서명운동이나 일본상품불매운동, 여론조성운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힘을 증명해 낼 수 있다면, 각국의 정부가 국가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일본의 가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판단아래 현재 정대협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 초까지 수거하여 12월 이내에 각 유엔가입국 외무성과 유엔에 보낼 계획이다.

3)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정대협이 유엔기구와 별도로 국제사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곳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이다. 이 재판소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 국가가 응해야 PCA에 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불응하면 불응하는대로 그것을 또한 이용하여 국제캠페인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정신대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PCA를 성공시키기 위한 연락회를 조직하여 활동중에 있고, 일본변호인들 20여명과, 한국에 10여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준비중에 있다. 지난 9월 15일에는 제소하기로 결정한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 그리고 한국변호인단 대표로 배금자 변호사가 함께 방일하여 일본민간단체들과 변호인단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PCA를 성공시키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오는 11월 27-9일까지는 서울에서 한.일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들의 PCA심포지움이 있을 계획이다.

VII.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의 운동이 운동초기의 민족문제, 여성문제라는 총체적 인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에 반한죄' 또는 '전쟁범죄'라는 인권에 대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의 용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반적인 여성문제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인권유린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전쟁과 강간' 또는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의 여성들과 연대하게 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연대운동 일본정부에 치명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광복 50주년인 내년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국제법적 배상, 책임자처벌 등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국내인권단체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